

다산포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밀어닥친 코로나19는 이제 팬데믹(Pandemic)을 넘어 패닉(Panic) 상태로,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감염과 확산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하락, 생산활동 둔화, 이자율 하락, 경기실적 악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대량 실업, 경기 둔화, 경제 악순환의 흐름은 자못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최전선이자 가장 밑바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피고용 종사자, 자영업자와 가족들, 지역의 서민 대중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 가며 살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이러한 추세가 일상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경기도를 필두로 정부도 1차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급박한 위기를 겨우 넘겼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로

## 2·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의 필요성

측정한 소비 지출은 지금 이전 최대 -17.7%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한 15주차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3주차에는 7.1% 증가를 경신했다. 이는 '중앙정부-경기도-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급된 결과이기도 하며, 이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실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원금 소진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25주차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인 상월인 1.5%(130원)가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부동산 폭등과 함께 무주택자와 셋방살이 서민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2·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를 중단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1차 재난지원금 정책(중앙정부의 전 국민

2171만 가구 14조 2천억 원, 서울시 8619억 원, 경기도 1조3천억 원, 경기도 시군 1조2천억 원 등)은 효과가 미미해진다. 경기가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곧장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원 대책에는 예산의 규모, 시기, 대상 등이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경제 정책은 시간의 예술이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정책 시행의 간격에 시간 지체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바로 적시에, 적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더 큰 태풍이 닥치기 전에 대안을 집행해야 한다. '가장 좋은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듯, 지금 가장 최선의 대안은 더 큰 침체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예방적 실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실행의 관건은 예산 확보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의 취약 지역 지원 예산을 앞당겨 지원할 경우라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소멸 지역(약 70개 지역) 및 취약 지역(약 10개 지역) 지원을 위한 21년도 예산 6~10조 원을 조속하게 뺏아 집행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지방채 발행 등 창의적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재난기본소득에 연계된 지역 화폐다. 지역 화폐의 유통기한을 비교적 짧은 2~3개월로 한정시킨다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경기 부진에 직접 해갈을 시켜주어야 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 지급할 각종 구제 수단, 실업수당, 생계보호지원금보다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이 더 선제적 예방 지원책이며,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이어서 경제적 성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수 부족, 적자 재정,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허삼만을 염려하여 동통 기획은 하지 않은 채 '재정(공간) 사정만 헤아리자'고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다. 이 엄중한 시국에 곡식을 곳간에 쌓어두고 미래를 기다려 보자고 한들, 오늘 당장 끼니를 굶는 서민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지역의 서민 대중이라 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이 폐업하고 실업자가 된다면, 공간은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이며, 곳간의 곡식을 아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세수는 정작 누구로부터 거둬들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NGO칼럼

## 에너지 자립 도시 성공을 위한 훈수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광주시는 지난 7월 21일 '광주형 AI(인공 지능)-그린 뉴딜' 비전을 보고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광주 RE100'을 실현하고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선언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시민발전소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적인 AI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밝힌 '2045년 에너지 자립 도시 선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2019년 광주시민 100명이 참석하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당시 광주시민이 목표로 설정한

'2040년 50% 전력 자립'에 어려움을 표했던 광주시가 파격에 가까운 정도로 전향적으로 전력 자립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광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시민 참여형 시민 에너지 발전소 기반 구축, 에너지 자립 마을,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한 것도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다. 광주의 에너지 자립 도시 선언은 타 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형 AI-그린뉴딜 선언'이 기존의 광주시 에너지 정책들과는 달리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만큼 전폭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주민 수용성 향상, 유기적이고 견고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행정 전반에 걸친 계획과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건축, 교통, 도심 녹지,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시 행정부서에서도 계획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에너지 자립 도시 계획이 반영된 전반적인 종합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총괄하는 기후 위기-에너지 자립 도시 부시장직을 신설하거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

하다. 에너지 자립 도시 지원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인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에너지 믹스에 대한 검토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광주시는 많은 부분을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 전지와 수소발전소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소가 '추출 수소'와 '부생 수소'로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수전해 수소, 즉 그린 수소로의 조기에 이행이 요구된다. 그린 수소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광주시에서 예상하는 온실 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완화 전망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원 구성에 한계가 있다더라도 특정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열, 소형 도시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적용한 공간 자원 발굴에 힘쓰고 시민과 기업 등에 좀 더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했을 때, 주민 수용성 향상과 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상이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방안으로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 자문협의회, 에너지 시민협의체, 에너지 시민실천단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7기에 들어 어렵게 마련된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 체계는 명확한 위상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 자립 도시 계획은 선언으로 그칠 여지가 크다.

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 여부는 시민 수용성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동참과 동의 없이는 에너지 자립 도시는 불가능하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할 때 에너지 자립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사회도 에너지 자립 도시 성공을 위한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비판적 입장에서 견제해 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전환-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환경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받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기 고

## 기후 변화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전남농업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1961년 세계 최초로 우주에 다녀온 우리 가가린은 귀환 인터뷰에서 처음 본 지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1968년 아폴로 8호가 최초로 찍은 사진 속 지구는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구슬이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매년 20억 톤의 먼지가 발생해 지구의 숨통을 죄고 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은 대기 중을 떠다니며 공기, 물, 토양을 더럽히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어 인류의 운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머지않아 지구가 먼지 행성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제는 규모와 파급력에서 그 어떤 사회 문제와도 차원이 다른 실존적 위기인 만큼 세계 각국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응 방향은 크게 완화와 적응, 두 갈래다. 완화는 온실 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고, 적응은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 맞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춰 대비하는 것이다.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농업 분야 역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변화에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농업 예산의 40%를 투입하고 있다. 2030년까지 화학 농약 사용량을 50%, 비료는 20% 감축하고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농도인 전남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자연과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친환경 인

증 면적 전국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유기 인종 면적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 선진 유기농업을 연구하고 전파할 유기농 명인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기농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유기농 생태 마을, 친환경 유기농 복합타운 등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영농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환경 정보와 작물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팜이 대표적이다. 현재 고충에는 교육, 연구, 생산, 수출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 팜 혁신 밸리를 조성 중이다. 앞으로 세계를 이끌 첨단 농업 융복합 단지이자 청년창업 모델로 우뚝 세울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단지 구축해 생산성과 품질은 높이고 환경 오염과 질병 발생은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전국 주요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

면서 패션 푸르트, 애플망고, 파파야, 커피 등 아열대 작물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에 전남은 기후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연구 단지를 유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장성에 합타온 등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농업·농업교육단지까지 모두 끌어와 미래 농업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자연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린 뉴딜을 추진 중이다. 전남 농업이 꿈꾸는 미래도 이와 다르지 않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해서 생산하는 것이다. 맑은 단순하지만 그에 담긴 의미는 크고 무겁다. 기후 변화 시대에 가장 실현하기 힘든 미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전남이기에 이번에도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열기 위해 주저 없이 힘차게 나아가 갈 것이다.

社說

## '국가 균형 발전' 보다 큰 그림이 필요하다

다시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행정수도는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우려가 많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둔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 동안 관련 정책이 중단되면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 비대, 호남권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각종 지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엿그제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은 46.8%를 차지했다. 이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18.0%,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12.8%였고 호남권은 9.8%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인구 이동 분석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호남권에서 수도권으

로 유출된 인구는 1만 명이었지만, 2016년부터 4년간은 6만 명이 달했다. 반면 충청권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입법부의 세종시로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우려가 많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둔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 동안 관련 정책이 중단되면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 비대, 호남권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각종 지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엿그제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은 46.8%를 차지했다. 이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18.0%,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12.8%였고 호남권은 9.8%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인구 이동 분석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호남권에서 수도권으

## 광주서 반려동물 하루 10여 마리 버려진다니

광주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은 35만 7000여 명이다. 시민 네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유기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하루 평균 11마리나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세 마리만 입양될 뿐 나머지는 죽거나 안락사되는 실정이다.

광주 도심에서 버려지는 동물은 2015년 1703마리에서 2019년 3830마리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동물을 유기하더라도 처벌이 미비한 수준(벌금 300만 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기 방지 역할을 하는 동물 등록제 등록률도 광주시의 경우 36%로 나타나 전국 평균 46%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기 동물을 수용하는 동물보호소 공

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광주에서 유일한 동물보호소인 북구 분촌동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500여 마리다. 적정 보호 두수(頭數)인 350마리를 초과했는데 보호소 안에서 죽어가는 동물도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 유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유기 시 현행 벌금 처분에 그치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그에 걸맞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페티켓'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키우려는 이라면 '가까이 두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애완(愛玩)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나의 짝'이라는 반려(伴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 유행병은 천체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하느님이 가하신 정의로운 노여움에 의한 것인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Decameron)에 나오는 구절이다. 14세기에 흑사병(페스트)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탈리아의 무역 도시 피렌체의 경우 1348년 흑사병 유행으로 인구 10만 명 중 절반이 사망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흑사병에 대처하는 피렌체 사람들의 유행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집안에 들어앉아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실컷 마시고 노래 부르며 하고 싶은 대로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다. 아직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지 못하던 때였으니 백신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전염병은 암흑의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170명을 비롯해 어제까지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더욱이 '7말·8초' 여름휴가 시즌마저 겹쳐 잠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사재기부터 허러 드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 다. 그야말로 글로벌 백신 경쟁전이다.

한데 이런 화학 백신만이 유일한 대안일까? 최재천이화여대석좌교수는 신간 '코로나 사피 유행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집안에 들어앉아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실컷 마시고 노래 부르며 하고 싶은 대로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다. 아직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지 못하던 때였으니 백신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전염병은 암흑의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코로나백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